

‘꿀잼도시’ 지향 광주시, 첫 관광지 지정 나섰다

5개구와 관광진흥법상 지정 돌입 전국 245곳 관광지... 광주시 전무 기본적 편의시설 없어 신청 안해

이른바 ‘꿀잼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지역 첫 관광지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명품 특화 관광지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까지다.

이번 용역은 관광지 지정·개발을 위한 규모 설정 등 기본구상, 관광지 지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법적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이른다.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이르는 관광단지와는 개념 상 차이가 있다.

국내 245곳이 관광지로 지정돼 있지만, 광주 지역에는 단 한 곳의 관광지도 없다.

그동안 관광지 지정 신청권자인 5개 자치구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기본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들어 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협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

전 법적 검토·후보지 선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안을 만들어 이를 각 자치구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안을 검토한 자치구가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면 광주시는 문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관광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 관광지 지정권자는 문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광주 시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지 지정·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과 기본구상, 사업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지 지정은 국비 확

보를 위한 근거이기도 하다. 아울러 화장실 등 각종 공공시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잠정 집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립5·18민주묘지 등 광주시 별도 관리지점의 방문객을 합산한 결과 2022년 광주 지역 총 관광객은 840만2747명에 이르렀다. 이는 2021년(449만 9679명) 대비 86.7% 증가한 수치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김영록 지사 “산불 예방에 행정력 총동원”

산불 감시요원 집중배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산불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연일 발생하는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을 들어 전남 기준 전남지역에서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5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이 늘어난 규모다. 산불 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 7건, 쓰레기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3건 등 대부분 주민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

하고 도청 공무원 시·군 전담제를 지시했다.

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을 총동원하고,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 예방·계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 대응해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산불 대부분이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입산자의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로 비롯된만큼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꼭 지키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응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행정부지사, 박창환 정무부지사 등 실국장들이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과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회 ‘가사노동 사회화’ 위한 정책토론회

광주시가 전국최초로 가사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가사수당 도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7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방안을 찾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박미정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경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고 정찬기 광

주시 빛고을50+센터장, 구은정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조교수, 장세레나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의 전 참여자21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라는 발제문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 돌봄, 요양 관련 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수행하던 돌봄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신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요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할 것과,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한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전남도,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 영재 재능 계발 지원

전남도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술 영재 120명을 선발해 재능 계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남도는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에 재능 있는 ‘예능영재 키움’ 참여 청소년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예능영재 키움’은 예술 꿈나무에게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예술 전문고등학교인 무안 소재 전남예술고와 광양 소재 한국창의예술고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활용해 4월부터 9개월간 전문 교육을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초

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기타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청소년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43)로 문의하면 된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지원... 전국 최초

월 100만원 한도 최고 500만원 지역 中企 730개 기업 혜택 기대

전남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

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 당 월 100만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 이하 전남지역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일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1)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7일 “지속되는 국제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한우가격 안정 위해 ‘소비촉진’ 추진

지역 축제 한우 판촉 행사 등 온·오프라인 판매 적극 나서

전남도가 한우 사육 규모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급락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 계획’을 세우고 전방위 대응에 들어간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도는 한우산업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흥수출하 자제, 농축협장·유통업체·관계기관 간담회, 학교·기업 단체급식 한우고기 사용 확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대적인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협 합인행사를 비롯해 지역 축제에 한우 판촉행사를 연계하고, 남도장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역 농·축협 판매장을 통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또 오는 10일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하고, 10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도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당초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한우대축제, 한우 먹는 날 행사도 앞당겨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한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체 70곳이 참여하는 ‘남도장터 기획전·특판행사’도 운영한다.

이밖에 각 시·군에서도 한우고기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의회를 사전에 개최하도

록 추진계획을 알리고 세부 실천 방안을 협의해 지역 농·축협과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와 협조해 대대적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는 2월 강진 청자축제, 3월 광양매화축제, 4월 영암왕인문화축제, 5월 함평나비축제, 보성세계차엑스포, 10월 함평국향대전, 강진갈대축제 등이 확정돼 연중 열린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한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범국민적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사육농가에서도 자발적인 암소감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